

# 정부의 특성화 지원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자

글\_우동기 영남대학교 총장 dkwoo@yumail.ac.kr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학은 고급의 과학지식과 첨단 기술의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와 새로운 고용의 창출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그 동안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인력의 양성이 라는 국내 지향적 교육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대학의 몸집은 비대해지고 고교 졸업생 중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보편적 교육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엘리트 인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보면, 연구 성과의 주요 지표인 과학기술 인용색인(SCI) 발표 편수는 지난해 세계 14위였지만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29위에 머물렀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5~34세 인구 중 대학교육 이수율은 4위를 차지한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52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9위로 나타났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상승하지 않는 한 국가경쟁력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새로운 환경을 선도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주체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

한 대학의 특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원리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방식이 교육시장 개방이든 경쟁시스템 도입이든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 대학을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학과 및 교수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과 인센티브 강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전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의 전공 또는 학과구조가 지속된다면 대학교육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는 경쟁력 상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통적인 대학 브랜드보다 학과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시장의 정서변화는 경쟁력이 취약한 학과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경쟁력이 있거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투자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이러한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지원 역시 대학의 국제화 및 산학협력사업성과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위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최근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규모는 현재 내국세 총


액의 3.4%에 달하는 3조2천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 약 70%인 2조4천억 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이 조정체제와 업무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분권화된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자칫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정과정이나 평가체제의 미흡 등으로 그 수명이 다한 학문 분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시스템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체계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목적과 내용간의 불일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효율적 예산집행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년대계' 중 가장 큰 국가사업인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집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나 과학기술부 등에서 추진중인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이 대상 대학이나 학문분야의 경쟁력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 위에서 이루어져왔는지를 짚어 보아야 한다.

내년에도 교육인적자원개발 예산 32조1천억 원 중 고등교육부문은 전년 대비 4.5% 인상된 3조6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고등교육부문 예산은 2단계 BK 21사업과 e-러닝 세계화 사업 등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양성, 지역의 발전전략에 맞춘 지역혁신과 이를 추진할 인력양성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산·학·연 협력

체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산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의 특성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 선정과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지원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과정에 대한 규제' 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성과에 대한 평가'로 지원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자 또는 연구팀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대학단위 지원은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비생산적인 경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총액배분과 자율편성,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 예산 등 재정개혁과 함께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체제 정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정책 입안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대학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예산지원과 집행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영남대학교 졸업 후 태국 AIT에서 석사학위를,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조근장 훈장을 수상했다.